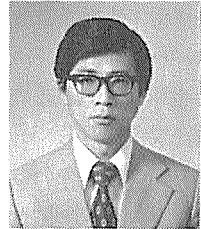


半導体産業 育成은 租稅 · 金融 부문부터



金 柱 采
亞南産業(株) 代表理事

세계의 半導体市場은 지난 10년 간 4배 이상 伸張하여 현재 100億弗 이상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85년도엔 지금에 2배, 80년대말에는 현재의 4배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半導体産業은 電算, 通信, 教育, 情報産業에 기술혁신을 가져오므로써 일생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 機器를 電子化 · 自動化 · 小型化 · 低廉化 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원동력으로써, 80년대말에 가면 電子工業은 각종 자동차 · 철강 · 화학공업 등을 앞질러 확대되어 산업의 主軸이 될 전망이 크다.

때문에 半導体 産業의 이 같은 좋은 시장성을 놓고, 선진 공업국들은 서로 앞서기 위해서 숨가쁜 신제품 개발과 원가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를 들면 16K 메모리 Chip은 작년에 20弗하던 것이 지금은 4弗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단 1년 사이에 제품 가격이 5 배나 급격히 다운된 것은 이미 16K 메모리 칩의 다음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64K

메모리 칩이 출현한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半導体産業은 비록 그것이 어마어마한 先行研究開發費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술개발에 앞서면 성공하고 기술개발에 뒤지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 설비를 가지고도 제품의 제값을 못받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한마디로 半導体産業은 자금과 기술이 미약한 나라로서는 그 속에 뛰어들어 국제경쟁을 하기가 꼭 어려운 산업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半導体 産業의 諸與件을 살펴볼 때, 그 육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半導体産業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문제를 살펴보자.

周知하다시피 半導体産業은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2~3,000만弗을 연구소나 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기술혁신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갖

춘 태세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1억弗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美國은 VHSI 계획에 따라 84년까지 2억 100만弗을 지원할 계획이며, 西獨은 VLSI 계획에 따라 앞으로 2년간 3억弗을, 프랑스는 美國으로부터 특허도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3억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며 日本 역시 4년간 3억 6,000弗을 지원하여 VLSI의 자급 생산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보면, 적은 財源이지만 쪼개서 쓸 곳이 많은 처지여서 半導体産業에 이와 같은 거대한 資金을 지원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技術과 財源이 없다고 하여 半導体産業의 육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半導体産業을 육성하는 나라를 보면, 우선 資金支援과 함께 더 근본적으로는 施設材에 대한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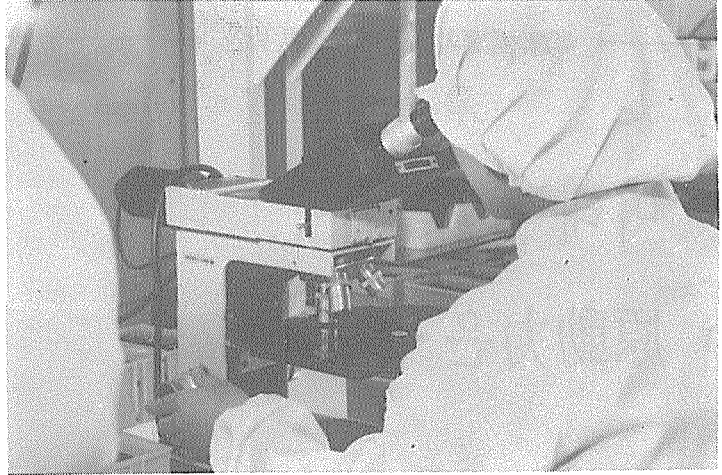
전 免稅와 機器 이상의 상각, 原副資材에 대한 면세 내지는 감면, 그리고 法印稅 감면 등의 租稅政策과 長期低利의 편리한 금융정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쓰므로써 半導體 분야에 自進投資가 유발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半導體 분야에서 시설 일부 감면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15~30%의 수입관세를 부담하므로써 국제경쟁력 弱化는 물론 投資意慾을 상실케 하고 있다. 原副資材 역시 高率의 관세를 부과시키므로써 완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고 한다.

租稅面에서는 비단 半導體뿐만 아니라 全電子분야에 관세·소비세 부담률이 이웃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 美·日 등의 국가에서는 電子製品의 擔稅率이 불과 0~15% 정도인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30~40%의 高率의 특별소비세를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각종 租稅의 減免 내지 免除措置 외에도 편리한 금융 혜택과 정부의 特別補助金 까지 지급되는 형편인데, 우리나라는 자금지원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租稅面의 혜택이라도 있어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70년대에 연평균 46%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국내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해 우리 경제의 先導産業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라도 과감히 租稅와 金融面에서의 조치를 취하므로써 企業이 국제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분야에 대한 조세 혜택이 당장 국가의 稅收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半導體産業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따라서 이 분야에 고급 인력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수출 증가 및 영업 이익의 발생은 물론, 고용된 고급 인력의 소득세 납세액만으로도 현재의 租稅收入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면에서도 施設材 도입에 長期低利의 용자가 있으므로써 국내 업체의 투자욕을 일으켜, 결국 그러한 용자는 고용 증대를 유발하고 그것은 곧 국가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意見은, 과거에도 정부 관계 부처 사이에 여러 번 논의된 것이나 아직 의견 통합을

못 보므로써 실효성 있는 결과에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半導體産業은 우리나라처럼 賦存資源이 적고 고급 인력이 풍부한 나라에 꼭 알맞는 산업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으며 반면 머리를 써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半導體 産業의 특징이다.

그런 때문에 日本은 이미 10년 전에 半導體産業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오늘날 美國과 세계의 선두를 다투는 입장이 되었고, 英國을 위시한 유럽諸國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두가 半導體産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라도 半導體 産業의 육성에 정부의 지원 자금이 충분치 못한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우선 租稅·金融面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므로써 企業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의 손을 빨리 쓰는 것이다.